

윤석열·한동훈 내일 만찬... 의정갈등 돌파구 찾나

당정간 엇박자에 회동 연기
의대 증원·김건희 특검 논의
독대 여부 최대 관심사 부상
與 일각선 김여사 사과 요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이 24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대 증원 문제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을 놓고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당초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만찬은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으로 당정이 엇박자를 내면서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만찬 순연과 함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연찬회에 불참하면서 윤-한 갈등설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 8일 진행된 대통령과 일부 의원들의 만찬에는 한 대표가 초대받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만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과 관련한 당정간 논의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려 환영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한 대표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 등 모든 안건을 열어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여야

의정 협의체 의제로 올리는 것 자체에 선을 긋고 있다. 이미 2025학년도 수시모집 등 대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대 정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협의체 합류를 거

부하고 있다.

만찬에서 추석 민심 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대응책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야당의 입법 강행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아닌 본회의 보이콧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김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을 의식한 판단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왔다.

오는 26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이탈표 우려가 나오자 '단 일대오'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김 여사의 사과와 함께 공개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최근 한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거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김현정

의 뉴스쇼' 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당원들을 만나면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 그래'까지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이러한 지적에 불편한 기색이다.

대통령실도 대국민 사과 등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이날 만찬이 양측의 인식 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시 간극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회동으로 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 대표가 만찬 직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독대가 이뤄질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만약 독대가 성사되면, 한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주요 당직자,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운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전진숙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수도권 집중”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을·사진)은 22일 윤석열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역 간 심리상당 서비스 제공기관 수에서 큰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26개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서울 280개(27.3%), 경기도 216개(21.1%) 등 수도권에 48.4%가 집중됐다. 반면, 부산 57개(5.6%), 경북 53개(5.2%), 전북특별자치도 49개



(4.8%) 수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이다.

전 의원은 "전국민이 어디서나 충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충해야하고 비대면 상담 도입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문수 “의대 8곳 지역인재전형 정부 권고 못 미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사진)은 22일 "비수도권 의대 26개 교 중 8개 교는 지역인재전형 정부 권고 60%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 부터 받은 '2024~2026학년도 의과대학별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입시에서 50.0%이던 지역인재전형이 올해 2025학년도 및 내년 2026학년도 입시에서 각각 59.7%와 61.8%로 늘어났다. 2026학년도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비



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광주지역 소재 국립대로 79.1%다. 가장 적은 학교는 강원 소재 사립대로 20.2%로 편차가 크다.지역인재전형 정부 권고 60%에 미치지 못하는 의대는 8개 교로, 강원 4개 교, 부산 2개 교, 대전과 제주 각 1개 교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책 취지에서 일탈한 곳은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10·16 재보선’ 24~28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는 10월16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교육감 1곳(서울시)과 기초단체장 4곳(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영광군·곡성군)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나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을 하기 어렵거나 직접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후 신고자 주민등록 지역 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김건희 특검 부결해도 재발의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22일 최종 부결해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특검 압박이 높아지고 있어 재의결 개연성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0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재의결이 불발되더라도 또다시 재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 전원에게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4일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26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방송4법을 비롯한 6가지 법안과 함께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또다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범죄를 자인하는 것이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천 개입 의혹을 덮기만 하려 다가는 결국 '김건희 게이트'는 국민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될"이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시정을 지나,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불어닥칠 민심의 광풍을 하루빨리 새겨들

으라"고 경고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세 글자만 들어가면 온갖 곳에서 국정농단급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지난 5월, 윤석열·김건희 직할 친위대를 만들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을 갈아치울 때 윤 대통령의 징계를 반대하던 정유미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장원지검장에 앉힌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직접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위임된 권력을 회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임종석 ‘두 개 국가론’ 민주당내 찬반 논란

김민석 “설익은 발상” 비판
“새 통일담론 꺼내야” 주장도

임종석(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을 두고 22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해야 한다"며 "평화적 장기공존 후에 통일 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뛴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남북 양 쪽에 흠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진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당 지도부는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논평을 자제해왔으나, 김 최고위원의 입장문을 통해 반대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도 두 국가론에 대한 논의

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남북 분단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통일 담론을 꺼내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연희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남북대결주의 회귀에 대한 분노와 절망 그리고 차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남북정책의 현실적 방향이라는 점에서 저는 공감을 표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설령 정권교체로 다시 민주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과거와 같이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화해와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임 전 실장의 발언이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설계하는 평화담론 논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 가을 폭우 피해 최소화 ‘한 목소리’

여야는 22일 기록적인 가을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폭우 피해가 최소화 되고,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가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유관기관에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세심하고 즉각적인 관리를 당부드리며, 당 또한 폭우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 등에서 머물고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젯밤을 기점으로 호우 특

보는 모두 해제되었지만,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땅 꺼짐 등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대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했다"며 "자연재해가 미미한 행정과 판단 오류로 인재형 사회적 참사가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